

공 개



의안번호	제 102 호
의 결 연 월 일	2023. 6. 28. (제 12 차)

의
결
사
항

온라인소액증권 발행 관련 결산서류 게재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람.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김 소 영
제출 연월일	2023. 6. 28.

1. 의결주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인 (주)민트에어 등 157사의 결산서류 게재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 (주)민트에어 등 157사의 결산서류 게재의무 위반혐의에 대해 기획 조사한 결과, 발견된 (주)민트에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온라인소액증권발행 관련 결산서류 게재의무 위반

○ 과태료 : (주)민트에어[비상장법인] 33,600,000원

4. 참고사항

※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하는 사항임

가. 관계법규 : <붙임 1>

☐ 결산서류 게재의무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16 제3항 제2호

나. (주)민트에어에 대한 과태료 산정내역 : <붙임 2>

(별지)

(주)민트에어에 대한 조치안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 (주)민트에어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 제2항 결산서류 게재의무 위반의 사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 제35의5호에 의하여 과태료 33,600,000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주)민트에어 [비상장법인]

- 대표이사 : 최유진*
- 사업자등록번호 : ***-**-*****
- 본점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36, 136호(송도동, 산학융합원)

* '23.2.9. 조사착수 후 '23.3.7. 사임하여 현재 □□□이 대표이사 권한대행

□ 조치이유

○ 결산서류 게재의무 위반

-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결산에 관한 서류*를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함에도

* 재무상태표와 그 부속 명세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 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등(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5호)

-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인 (주)민트에어는 사업연도(2020, 2021) 경과 후 90일 이내(2021.3.31, 2022.3.31)에 결산서류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홈페이지에 총 2회 게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 계 법 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 ②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6조(보고 및 조사) ①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별표 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조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15] 금융위원회의 처분 사유

1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④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5의5.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제3항제6호의5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6(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③ 법 제117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2.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제137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서류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둘 이상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모집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에 게재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법인인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나. 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를 통해 주권이 거래되는 법인

다. 모집한 증권의 상환 또는 소각을 완료한 법인

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① 법 제1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 다만,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제17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등, 매 사업연도말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소유자 수가 25명 미만인 법인,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상환 또는 소각을 완료한 법인과 제362조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만을 발행한 법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재무상태표와 그 부속 명세서

나.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 명세서

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라.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법인만 해당한다)

제376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법 제42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경고

나. 주의

② 법 제426조제5항에 따른 법 별표 15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별표19] 금융위원회의 처분 사유

2. 별표 5부터 별표 18까지의 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5]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

1의16. 법 제117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거나 그 밖에 정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③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438조제4항에 따라 **별표 20**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별표20]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

158. 제376조제1항제11호가목(경고)·나목(주의)에 따른 조치.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두. 법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35호의5	6,00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③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과태료의 부과)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별표 제2호의2] 과태료 부과기준(시행 2020. 1. 16.)

2. 과태료 산정 방식

마.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금액을 산정한다.

4. 최종과태료 부과 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의 합을 차감한 비율을 예정금액에 적용하며,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 한도액을 넘지 못한다.

나. 감경 사유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 관련 규제 위반행위 및 소액공모 관련 규제 위반행위의 경우 공모금액 또는 위반행위로 인한 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예정금액의 100분의 3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위반 유형	감경사유
①~⑩ 생략 ⑪ 온라인소액증권발행 결산서류 게재	위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아니거나, 주주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

5. 과태료 부과 면제 등

가. 위반자의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위반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위반자가 사망한 경우
- (2) 법인이 청산사무를 사실상 종결하여 행정처분 통지 대상자의 소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청산등기가 완료된 경우
- (3) 법인이 영업을 폐지한 후 해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나 인적·물적 시설 등 법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 (4) 법인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는 등 조치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나. 온라인소액증권발행 관련 규제 위반행위 및 소액공모 관련 규제 위반행위가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미한 위반행위로서 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경고·주의조치로 갈음할 수 있다.

[금융기관점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기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나. 감경 사유

-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주)민트에어에 대한 과태료 산정내역

I. 산정원칙

- ☐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제137조 제1항 제5호 각 목의 서류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6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35의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90조]

II. 산정결과

- ☐ 총 과태료 부과금액 : 33,600,000원

(단위: 원)

구 분	과태료 부과금액
① 결산서류 게재의무 위반(2020년도)	16,800,000
② 결산서류 게재의무 위반(2021년도)	16,800,000
합 계	33,600,000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본시장조사총괄과	공시심사실
연락처	02-2100-2605	02-3145-8470